

프랑스 중견기업법의 제정배경

김 영 우

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



I. 들어가며

독일경제와 더불어 EU경제의 기관차역할을 해왔던 프랑스경제가 1980년대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2000년대에 접어들어 개혁을 위한 수술대에 오른 바 있다. 전 IMF총재로 알려진 캉드쉬 프랑스 중앙은행 고문은 2004년 10월 제출한 공식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진단하고 성장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캉드쉬 보고서는 2004년 당시 프랑스경제가 지닌 문제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농업제조업 등 전통산업이 사양화되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중국과 인도 등 거대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해 제조업의 해외이전과 이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약화이다. 둘째, 현재와 같은 노령화추세가 계속될 경우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50년에 이르러서는 GDP의 1.2%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어 의료보험을 포함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즉각적인 노동시장개혁 및 정부의 관련 제도개편이 없을 경우, 연금부담 가중 및 실질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으로 경제성장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어 프랑스 경제의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안에 따라 프랑스 상원은 아탈리 위원회가 제시하는 친기업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7월 '경제현대화법(loi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을 도입했다. 이 법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치한 중견기업의 범주를 신설하는 법을 제정한 것이다. 경제현대화법 51조의 시행령 n.2008-1354는 세계최초로 중견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항들을 정의하고 있다. 즉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기업들로서 종업원 수가 250명 이상 5,000명 미만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고 또한 연 매출액이 15억 유로, 혹은 대차대조표상 20억 유로를 넘지 않는 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II. 중견기업의 범위와 현황

2008년 1월 아탈리보고서가 제출되고 나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8월 경제현대화법이 제정되고 중견기업 지원의 근거조항이 마련되었다. 프랑스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PME)과 대기업(GE) 사이에 위치한 범주에 속해 있다. 프랑스가 중견기업 범주를 신설한 이유는 유럽 경쟁국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이점을 누리기는커녕 대기업으로 간주돼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평가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는 다른 범위를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근거조항을 만들게 되었다. 프랑스의 기업분류 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 프랑스 기업분류 범주

분류	연간 종업원수	연간 매출액	or	총자산
초소형기업	10명 미만	2백만 유로 이하		2백만 유로 이하
중소기업	10~249명	2백만~50백만 유로		2백만~43백만 유로
중견기업	250~4,999명	50백만~15억 유로		43백만~20억 유로
대기업	5,000명 이상	15억 유로 초과		20억 유로 초과

자료: INSEE

프랑스의 중견기업은 2007년 기준 총 4,576개로 나타나고 있다.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분포한 것은 250~349명의 구간으로 1,132개 기업이 해당한다. 비율로 보면 이 범위가 전체 25%를 차지하고 500~999명 범위가 21%, 250명 미만인 2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업원 수를 보면 중견기업 전체 종사자는 282만명이며 그중 26%인 74만명이 1000~1999명 범위의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부가가치를 보면 전체 중견기업의 총 부가가치는 1,870억 유로를 생산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가 클수록 기업숫자는 작지만 부가가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을 보면 1,750억 유로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와 비슷하게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대체로 수출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종업원 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5〉 프랑스 중견기업의 종업원 수별 현황

규모(종업원수)	기업	%	종업원(천명)	%	기업당평균 부가가치(10억유로)	%	수출(10억유로)	%	자회사	기업당 평균 자회사수
총계	4,576	100	2,823	100	617	187	100	175	100	40,149
250미만	959	21	136	5	142	16	9	28	16	5,389
250~349	1,132	25	332	12	293	19	10	14	8	6,074
350~499	829	18	345	12	416	21	11	15	9	6,758
500~999	969	21	665	24	687	44	24	41	23	9,569
1000~1999	433	9	603	21	1,393	39	21	37	21	6,730
2000~4999	254	6	742	26	2,921	47	25	39	22	5,629

자료:프랑스 통계청(INSEE)

III. 중견기업 지원정책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농업국으로 EU통합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독일과 더불어 유럽통합과 성장에 실질적인 기관차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내수의존형 경제구조의 한계가 198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의 가속화와 맞물려 경쟁국인 독일과의 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랜 경제성장과정에서 만들어졌던 낡은 법률들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중견기업의 육성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에 걸 맞는 지원정책을 현대화하고, 특히 중견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감세, 기술 혁신, 금융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세를 실시했다. 프랑스정부는 기업들을 위한 각종 세제가 오히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아탈리위원회 의 진단에 따라 구매력 증진을 위한 추가 감세를 실시했다. 이것은 정부가 기업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지만 기업들도 투자를 확대하여 이윤창출을 극대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구상에서 나온 것이다. 프랑스 정부의 감세노력 결과, 중견기업의 전체소득 대비 과세율(법인세 및 생산세)이 2000년 11%로 중소기업에 비해 1.2%가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 9%를 기록하여 중소기업(9.8%)과 거의 같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 반면 대기업은 같은 기간 16.3%에서 12.8%로 하락했으나 중견기업과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사르코지 정부는 2008년 글로벌 위기로 약화된 자국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R&D 투자지원에 집중했으며, 올랑드 정부도 '13년 정부 예산법에 기업 혁신투자 지원예산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기관인 BPIfrance는 기술이전지원과 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기술이전지원(Aide au Transfert de Technologie: ATT)은 연구소와 기업 간, 기업과 기업 간의 원활한 기술습득과 판매를 위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현 가능성 검토 후 초기 5만 유로 한도 내에서 예산의 40%를 지원하고 나머지 60%는 실행단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금융지원을 늘리고 있다. 2005년 설립된 프랑스혁신청(OSEO)은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단일창구 기능을 하고 있으며, OSEO의 보증지원을 중견기업으로 확대적용하고 있다. 특히 2009년 경제현대화법이 제정되고 나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OSEO의 총 보증지원금의 약 30%를 중견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2009년 지원실적은 449개 기업을 대상으로 10억 유로를 지원했으며 업체별 보증한도도 중소기업 보다 10배인 1천5백만 유로로 정하고 있다. 한편 시중은행 부과세 저축계좌의 잉여재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9년 중소·중견기업 지원실적은 총 170억 유로에 달한다.

프랑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현대화법을 통해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먼저 프랑스 중견기업은 해외시장을 파고들기에 충분한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허리역할을 중견기업이 담당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다음, 중견기업의 60%에 달하는 가족기업의 승계비용이 독일에 비해 낮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관점이다. BN